

새만금사업 용역분야 지역기업 우대기준 마련

용역계약 평가점수에 지역기업 30% 이상 참여 시 최대 2점 적용... 새만금 사업 용역계약에 지역기업 80억원 이상 수주 '기대'

전북도가 새만금사업 전북 지역기업 참여 확대를 위한 용역분야 우대 기준이 마련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새만금 사업 공사계약과 지역기업 참여에 적용했던 우대기준을 건설기술 용역계약까지 확대한다.

이에, 전북도에 주된 영입소를 두고 있는 지역기업의 새만금 사업참여 기회가 넓어지고 새만금 사업 참여를 희망할 경우 종합 배점 등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그간, 새만금 사업지역에서 중앙부처나 새만금개발공사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기술 용역계약은 '국가

계약'에 따라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과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찰제 세부심사기준'이 적용됐다.

그러나 해당 심사기준에는 지역기업에 배려하는 평가점수가 없어, 기술력 등 경쟁력이 약한 지역기업 참여율이 저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도는 새만금사업 용역계약에 대한 지역기업의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해 새만금개발청에 우대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실제 도는 새만금개발청과 함께, 지난해 7월부터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을 지속적으로 방문, 새만금사업 용역계약에 대한 지역기업의

참여를 우대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새만금 건설기술 용역계약 우대기준은 25일 개정·고시될 예정이다. 지역기업이 입찰하는 경우, 참여 비율에 따라 평가점수 100점 중 최대 2점까지 받게 된다.

이에 그간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 시 지역기업들을 배제하고, 입찰에 참여했던 대형용역사들은 지역 기업들과 함께 입찰에 참여해야만, 지역기업 참여 비율에 따른 평가점수 최대 2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용역계약을 위해서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도는 "앞으로 새만금 사업지역에서 발주하는 건설기술 용역계약에 지역

기업의 참여 비율이 30% 이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2022년도에 신규 발주되는 기술용역은 약 280억으로 신규 기준 적용에 따라 지역업체가 30% 참여할 경우 약 80억원의 수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는 지역 업체의 어려운 현실과 지역 경제활성화라는 공통된 인식하에서 나온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편, 새만금 사업지역에서 발주하는 공사계약의 경우, 지역기업 우대 기준이 지난 2017년 7월에 마련된 이후 지역기업 참여율은 12.4%에서 25.7%로 약 2배 정도 증가하는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호상 기자



외국어 자원봉사자 발대식 개최

'JB Wings' ... 8개 언어로 전북 관광 홍보 강화

전북도가 순창월랜드에서 온·오프라인 병행행사로 전북도 해외관광객 확대서비스 전담 외국어 자원봉사단 'JB Wings'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외국어 자원봉사단'은 외국어와 한국어가 능통한 도내 거주하는 내·외국인으로 'JB Wings'로 위촉된 후, 전북도 외국인 관광객 수용태세 합의를 위한 14개 시·군 관광자원봉사단, 번역 및 간수, 국제행사 지원 및 전북 관광 홍보 등의 역할 및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이날 발대식은 자원봉사단 'JB Wings' 네이밍 및 슬로건 (Flapping for a journey 여정을 위한 날갯짓) 선포식, 위촉장 수여, 자원봉사단 선서, 기념촬영 등 1부 행사에 이어, 전북도 문화관광 현황, 전북도 국제

행사, 자원봉사단 역할과 활동에 대한 오리엔테이션과 순창월랜드 체험 활동으로 진행됐다.

도는 홍보마케팅과 관광수용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는 외국어 자원봉사단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작년까지 영어, 중국어, 일본어 3개 언어 활동 중심에서 올해는 베트남어, 몽골어, 러시아어, 조지아어 등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동유럽 국가 등으로 확대해 새로운 국제관광 시장 강화에도 더 힘을 기울인다.

또한, 해외 문화, 예술, 스포츠 단체를 대상으로 한 도내 안전하고 특별한 관광지 중심 정기메일 발송 및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위챗, 틱톡 등 다양한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지속적인 홍보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 인권증진실무협의회 개최

'신뢰와 존중으로 포용하는 인권도시, 전북' 비전 제시 4대 전략목표별 세부사업 추진 위한 부서간 협력 강화

전북도가 새롭게 수립된 '제2차 전북도 인권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인권증진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도는 '전북도 인권기본조례'에 따라 매 5년마다 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 제3차 국가인권기본계획,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 등 제반 여건과 도민인권실태조사 결과 분석 등을 통해 제2차 전라북도 인권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2022~2026)을 마련했다.

제2차 기본계획은 '신뢰와 존중으로 포용하는 인권도시, 전북'이라는 비전에 예방적 인권행정지원체계 강화, 공공기관 인권경영기반 구축 사회적 약자 맞춤형 인권보장 제도 수립, 도민참여형 인권증진문화 확산 등 4대 전략목표별 세부사업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제2차 기본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인권담당관실을 비롯한 14개 관계부서가 참여했으며, 2차 기본계획 수립에 참여한 전북연구원 이종섭박사의 설명 후 각 사업에 대한 논의가



전북도가 새롭게 수립된 제2차 전북도 인권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인권증진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진행됐다.

도는 이날 진행된 전북도 인권증진 실무협의회를 토대로 기본계획에 대한 관계부서의 이해도를 높이고, 지속·확대되는 사업의 시행계획을 우선 수립하는 등 향후 5년간 인권정책

을 단계적으로 추진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인권증진정책을 추진해 인권정책 당사자로서 도민, 사회적약자, 민간기관, 공공기관 등 도내 전반적인 인권보호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조봉업 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실무협의회와 같이 여러 관계부서와의 협력을 통해 도내 인권이 한층 더 보장되고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 개학기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청소년 유해업소·위해식품 제조·판매업소 기획단속 실시

전북도가 상반기 개학을 맞아 도내 초·중·고등학교 일대의 식품제조·판매업소 및 청소년 유해업소 등을 대상으로 단속반을 편성, 2월 28일부터 3월 25일까지 4주간 기획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획단속은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도내 학교 주변 일대의 식품 제조·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식품안전 관련사항을 집중 단속한다.

또, 동시에 청소년 유해업소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술, 담배 등) 제공 및 판매 행위 등을 단속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및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사용 여부, ▲무신고 또는 무표시 원료(냉동, 냉장 보관 등)의 적정성 여부,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주류, 담배 등) 제공 및 판매 금지, ▲노래방·PC방·점심집 등에서 청소년 출입

불가시간 준수, ▲단란주점·유흥주점 등에서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등이다.

아울러, 청소년의 유동인구가 많은 영업소를 대상으로 민간에서 위촉된 생활안전지원팀(30명)과 함께, 코로나19 방역수칙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영업자 준수사항이 적힌 전단지를 배부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청소년 보호에 동참을 호소할 계획이다.

정화영 도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도내 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에 노출되는 요인을 줄여,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이번 기획 단속을 실시한다"며 "학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청소년 유해업소에 불법적인 요소가 발견될 시 전북도청 특별사법경찰과(063-280-1399) 또는, 안전신문고(www.safepeople.go.kr)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유호상 기자

정읍시의회 임시회 폐회

정읍시의회(의장 조상중)는 제2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를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마무렸다.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이상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소상공인의 부담은 줄이고 지역경제는 살리는 '정읍 맞춤형 공공배달 앱'을 개발해야 한다"며 정읍 맞춤형 공공배달 앱의 개발과 다양한 활용방안을 연구하여 지역 소상공인의 경제적 활력에 주력할 것을 강조했다. 이도형 의원은 5분 발언에서 산업단지에 화학물질, 독극물 오염사고 등 오염물질 유출사고 발생 시 유해물질의 하천직접유입 차단하는 완충저류시설 설치를 위한 국비보조금을 확보할 것을 촉구하였다.

정상섭 의원은 정읍시청 내 조직개편과 관련 팀을 대폭 줄이고 업무에 숙련된 일한 팀원을 늘려서 복잡하고 난해한 일들을 신속히 처리하는 방향으로 업무분장을 조정하는 등 합리적 인사시스템을 만들 것을 역설했다.

안전심사를 통해 자치행정위원의 소관 정상섭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혜숙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남희 의원의 5명이 발의한 '정읍시 공익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박일 의원의 1명이 발의한 '정읍시 지역차안회의 설치운영 및 지역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원안가결 됐다. 경제산업위원회의 소관 김은주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이도형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한옥 지원 조례안' 등 2건이 수정가결 되었다.

끝으로 이남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본정부의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중단 촉구 결의문'도 원안대로 채택됐다. /정읍=김대환 기자

국내 최대 전기안전교육 '산실'

정읍시 전기안전교육원 기공식 연간 6200명 교육생 유입 에너지 신사업 전문인력 양성

전북도는 정읍 신정동 첨단과학산업단지내 신축부지에서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교육원 기공식을 개최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권민기 기자 18면)

이날 기공식에는 조봉업 행정부지사,

공사 박지현 사장을 비롯해 유진섭 정읍시장 조상중 정읍시의회 의장과 도내 언론사 사장 등 내외부 인사 2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기공식에 참석한 조봉업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오는 2023년 11월 교육원이 완공돼 본격적인 교육이 실시되면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천명에 이르는 교육생 유입을 통해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교육원이 지역에 성공적으로 뿌리

내려 국내 에너지 안전의 전진기지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지난 2014년 전북혁신도시로 본사를 이전하고, ESS 안전성 평가센터 공모 전기안전기술개발 예타 등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교육원 이전을 계기로 전기안전분야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시너지 효과가 배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유호상 기자

새만금 스마트그린산단, RE100 실현 선도

새만금개발청, 직접 전력구매계약 선제 대비 입주기업 전력구매단가 절감 국비지원 추진

새만금개발청(청장 양충모)은 우리나라 최초 RE100(재생에너지 100%사용) 산단인 '새만금 스마트그린산단'의 RE100 실현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재생에너지 공급사업자와 전기사용자간 직접 전력구매계약(이하 PPA) 시행에 대비해 관련 기반 시설(인프라)을 강화하고, 전력구매단가를 낮출 수 있는 시범 선도사업을 추진해 세계 최고 수준의 RE100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지난 2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육상태양광 잔여 용지에 민간투자자 30MW 태양광 발전 단지를 구축해 재생에너지 생산환경

을 강화하고, 연내 민간사업자 공모·선정을 완료해 오는 2025년 말부터 발전용 개시할 예정이다.

또한, 재생에너지 공급비용을 낮추기 위해 오는 2024년까지 송전설비, 통합관제센터 등의 전력기반시설을 국비(25억 원)로 조성해 전력 생산원가를 절감시켜 입주기업의 전력구매비용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30MW 태양광 발전사업자와 스마트그린산단 입주기업 간 '직접 PPA' 체계를 구축해 재생에너지의 생산-공급-사용을 새만금 내에서 완결시키는 진정한 RE100 생태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한편, 기업의 RE100 실현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를 직접 공급받을 수

있는 '직접 PPA' 제도가 활성화해야 하지만, 국내에는 이에 대한 기반이 미흡해 기업이 한전으로부터 녹색프리미엄이나 재생에너지 인증서(REC)를 구매하는 방법이 주로 활용돼 왔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작년 10월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다음 달에 '직접 PPA' 세부 지침을 확정·고시해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성태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기업의 RE100 캠페인은 2050년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선도적인 기업들은 목표 연도를 2025년(나이키·마래에셋 등), 2030년(인텔·PKG·SKET·LG엔솔 등)으로 발표한 바 있다"면서 "새만금 스마트그린산단은 이러한 선도 기업들이 RE100을 작기에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산업단지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민간체육시설 고용지원사업' 신청 접수

종사자 1인당 월 최대 180만원·최대 6개월 지원

전북도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체육시설업계가 고용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총 444억 원을 투입해, 민간체육시설업 종사자 고용을 지원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지난해 추진한 '실내체육시설 고용지원 사업'의 후속으로, 올해는 실내체육시설뿐만 아니라 풋살장, 야구장 등 실외체육시설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지원액도 종사자를 신규 채용할 경우, 최대 6개월간 월 180만 원에

서 180만 원으로 상향해 지원한다.

신청은 28일부터 선착순으로 받으며,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민체육진흥공단 누리집(www.kspo.or.kr)을 방문하거나, 전화상담실(☎1588-1182)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윤동욱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체육시설업계가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어, 도내 관련 업계의 적극 참여로 조금이나마 체육시설 운영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도,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시설 재난지원금 신청기한 연장

전북도가 행정명령 이행시설 재난지원금 신청기한을 오는 3월 18일까지 3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도는 이번 재난지원금은 당초 28일까지 신청기한이었으나, 자격을 갖추지 못해 신청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격리 등으로 기한을 놓쳐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신청기한을 연

장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급기한도 내달 31일까지 연장한다.

한편, 전북도 행정명령이행시설 재난지원금은 지난 23일 현재 계획대비 90%인 54,539건이 신청 접수됐으며, 총 365억 원(70%)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호상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나와 내 가족을 위한 일입니다.